

제434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2026년4월6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8062)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
3. 경제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8062) 2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 2
- 상임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 김정호) 인사 3
3. 경제에 관한 질문 3
 - 대정부질문 의원(이언주) 3
 - 대정부질문 의원(柳榮夏) 10
 - 대정부질문 의원(오기형) 15
 - 대정부질문 의원(박수영) 23
 - 대정부질문 의원(김남근) 30
 - 대정부질문 의원(김선교) 35
 - 대정부질문 의원(박범계) 41
 - 대정부질문 의원(김은혜) 47
 - 대정부질문 의원(권향엽) 57
 - 대정부질문 의원(박지혜) 63

(14시09분 개의)

○의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방청석에 국회 본회의를 찾아온 우리 국민들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실 소개로 부천시갑 지역위원회 소속 AI미래산업특별위원회·체육특별위원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신정훈 의원실 소개로 전남 나주반남중학교 학생들 오셨고요. 민병덕 의원실 소개로 인도성지순례단 단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의안번호 2218062)

(14시10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준혁 의원, 전진숙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2분 투표개시)

○의장 우원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7표 중 163표를 얻은 김정호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상임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 김정호) 인사

○의장 우원식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혜시를 국회의원 김정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야 의원님들과 두루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환경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노동존중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상임위입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안보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100% 수입하고 있는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빠르게 줄여 나가고 10%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노동 존중과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도 진실하고 절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도 인사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원식 앞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도 인사해야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고맙습니다.

○의장 우원식 제가 상임위원회 16년 하는 중에 8년을 환경노동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보다 물도 포함되고 기후·에너지까지 포함돼서 이제는 굉장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장께서 열심히 위원들과 함께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3. 경제에 관한 질문

(14시31분)

○의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3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이언주)

(14시32분)

○의장 우원식 그러면 먼저 경기 용인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용인정 지역의 이연주 국회의원입니다.

내란으로 망가진 경제가 새 정부 들어서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에 중동 전쟁이라는 뜻밖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문제로 시작된 전쟁이지만 중동의 원유와 가스의 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서 이제는 에너지 공급망 전쟁으로 전환된 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가장 값싼 물류비로 가장 저렴한 중동산 원유와 가스를 독점적으로 장기 계약하고 그걸 토대로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장치 산업과 전력 인프라를 발전시켜 세계 최고의 정유·석유화학 제조 국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기계, 조선 등 K-매뉴팩처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의 원료인 나프타 등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기초소재로 쓰여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원가 상승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존 문제로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석유 70%, 나프타 45%, 중동에서 직수입하고 있고 나머지 나프타 55%조차도 원유를 분해해서 국내 생산되는 것이니 여기 석유 공급이 끊기면 산업 생산이 중단되는 것이어서 단순히 민생이 어려워진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변화나 산업구조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안보 시대가 도래한 만큼 단기적 위기 대응책과 중장기적 전략 등 여러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선 에너지 문제 묻기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연주 의원 얼마 전에 구글에서 터보퀀트 알고리즘을 발표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이연주 의원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대폭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터보퀀트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는 전망도 일부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접근성을 높여서 전체로는 수요를 더 높이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더 다수인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연주 의원 예,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술혁신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낙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이 불거졌던 전북 새만금은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퍼지컬 AI 산단 조성을 위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투자를 대

규모로 하기로 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때 총리님께서도 큰 역할 하셨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예, 지금 현대차 전북 새만금 투자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전북 차원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일종의 상징·선도적 의미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후속조치와 인프라를 하는 것을 지금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이전설이 불거졌던 게 이제 사그라들기는 했습니다만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인 경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토지 공급 계약이나 토지 보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지금 조금 기대만큼 진도가 덜 나가는, 한 반 조금 못 미치게 보상이 되고 있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관련한 LH 사장 공백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단 공사도 시작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시작할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예정한 시기가…… 잠깐만요. 30년 조금 전이어서……

○이언주 의원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산단 공사 착수는…… 그것은 기공인 것 같고 착수는 내년에 할 계획인데요. 정부가……

○국무총리 김민석 보상이 다 되는 걸 전제로 할 때……

○이언주 의원 그리고 보상이 다 되지 않더라도 착수는 일단 할 수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착수는 할 수 있지요.

○이언주 의원 예,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국무총리 김민석 정부에서 관련된 부분에 차질이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언주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원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원유 수입량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에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 그리고 일부 홍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송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홍해로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관련한 선사들의 판단도 연계되고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이언주 의원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전에 80년대인가요? 이란-이라크 전쟁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런 상황을, 그때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육상에

수송관을 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송유관이 동서로 있는데요. 양부로 해서 송유관이 있고 그러면 홍해로 해서 예멘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예멘 쪽의 후티 반군 문제가 있어서 걱정된다 아마 그 말씀 하시는……

○국무총리 김민석 후티 반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것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다만 이란은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에 청해부대도 아덴만에 있고요. 그래서 이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위를 하거나 방어를 하더라도?

○국무총리 김민석 물론 그렇습시다마는 이게 꼭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상황변수가 있는 것이어서 저희로서는 우리 선적한 배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변수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그것과 필요, 예를 들어 일정한 위험부담을 감안해서도 어떤 판단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올지, 그것은 그야말로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미국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삼 주 정도 있으면 전쟁을 끝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미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끝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철수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바로 풀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다음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또한 사실 현재로서는 아주 신중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이후 전쟁과 관련한 방침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행정부가 전쟁을 개전할 권한이 있어도 일정 시기 이후에는 그것이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결정을 어느 한쪽이라고 꼭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일정하게 그런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전제하라면 말씀처럼 미국이 전장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 이후에 이란과 당시 현지의 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서너 가지의 시나리오를 놓고 저희들이 따져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 작업도 필요한 것이어서 저희는 그때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지금 보면 어쨌든 동맹 간의 다자외교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된 에너지안보 외교 이런 다방면의 여러 가지를 아마 하고 계실 걸로 짐작이 됩니다. 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보의 범위도 굉장히 광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홍해의 양부항 그리고 UAE의 푸자이라항을 비롯해서 이런 쪽도 수송의 경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벗이 되는 중질유 확보가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동 외에 다른 항의, 다른 곳의 중질유 확보를 위한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번에 드러났지만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에너지는 다 수입하고 그 수입의

대부분이 중동이고 중동에서도 호르무즈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상황이 생기면 꿈쩍 못하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재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근본적인 대체선을 찾는 문제보다는 우선 당면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수입선을 지역도 이전하고 다변화하는 문제를 아주 절박하게 생각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더해서 과연 이러한 화석에너지 의존 체제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종래의 당연한 생각,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원래도 방침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더욱더 앞당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당기려는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논의했고 그조차도 더 빨리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말씀대로 한다면 공급선의 다변화, 지역 자체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자체의 성격을 다각화하는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벗이 되는 중질유는 일단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중질유를 중동 말고 다른 데서도……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그다음에 경질유를 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관련돼 있는 해당 국가들과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사실 국제법상 그렇다고 해서 적법한 것은 아니거든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래서 미국이 철수한 뒤에도 계속 이렇게 됐을 때 통행료를 내는 것이 관용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플라카 해협이나 모든 곳이 그렇게 인용이 될 건데요—이 희망봉 말고 다른 겁니다—그래서 지금 저거는 수에즈운하 통해 가지고 홍해로 못 나오게 되면 빙 돌아 가지고 엄청나게 물류비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제사회하고 공조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근본적으로는 말씀처럼 저 상황이 된다면 국제법에 맞지 않는 것이 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국제적 현실은 꼭 법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과 현실, 법에 대한 주장과 현실적 대비를 같이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처럼 지금은 우선 당장의 대응을 하면서 지금 저 상황, 미국은 빠져나가고 그런데 여전히 실제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검토하고 있는 옵션 중의 하나로 보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사에서 현시점에서도 일부 나라들이 통행세를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니까는 현재로서 저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려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아서 얼굴 색깔이 좀 안 좋아진……

○국무총리 김민석 괜찮습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고맙습니다.

○이언주 의원 산업부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총리님께도 질의했었는데요. 피벗이 되는 중질유 확보가 일단 필요하긴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대안들이 좀 있습니까, 중동 말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몇 군데, 지금 구체적인 나라는 거명……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각 나라가 원유 확보 경쟁 중이라 저희가 어느 나라를……

○이언주 의원 가격이 올라가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가격이 올라가서 언급은,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질유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축유가 상당 부분이 중질유로 되어 있어서 일종의 스와프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경질유를 확보하면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중질유를 빌려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단 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 경질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정유사들이 기존에 중질유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대체 설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도를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그 설비 개체에 필요한 유도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유사들이 중질유와 경질유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쓰는데 주로 중질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번에 중동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여서, 지금 당장은 구조를 뒤편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경질유를 할 수 있는, 나프타 정유시설을 갖추는 걸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언주 의원 저희가 어차피 에너지 다변화도 필요하지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직계열화돼 있는 산업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측면에서 이런 나프타라든가 원유의 기본적인 또 중질유와 기본적인, 어떤 피벗이 되는 중질유의 기본 최저베이스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이언주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더라도 최저한 이 어느 정도인지는 산업부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셔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주저하는데 딱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언주 의원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프타조차도 경질나프타가 있고 중질나프타가 있고, 주로 경질나프타가 우리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원료가 되고 중질나프타가 BTX, 방향족 벤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경질나프타가 주로 수입도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석유화학제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질나프타 확

보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석유화학 정제 전체의 일반 구조를 봤을 때 경질나프타를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석유화학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산업 내에서의 전환도 저희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연주 의원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대부분 다 수입하고 또 어차피 정유에서도 수입한 정유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이연주 의원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러면 이 산업에 다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세척에 필요한 헬륨가스 이런 것도 결국은 나프타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잘못했을 때 우리 산업이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비극이거든요.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소비재에 비해서 산업에 먼저 투입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이미 시작해서 4월, 5월 동안 저희들이 전체 품목들에 대해서 수급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어느 품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주요 품목은 대부분이 한 3개월 정도의 물량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특히 말씀하셨던 반도체, 조선 등 우리 주요 산업들이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서 각 산업·협회·부처 이렇게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의원 LNG는 문제가 없나요? 불가항력 선언을 했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LNG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쟁 발발하자마자, LNG는 저희들이 지금 카타르산이 한 15% 되는데 그다음 날, 저희가 카타르산 대체를…… 올해 제 기억에 한 110만t 정도 하기로 돼 있는 것을 그다음 날부터 한 며칠 사이에 일단은 확보를 해 뒀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데, 다만 LNG 같은 경우는 발전용이라든지 이렇게 전기 가격에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원자력발전을 많이 가동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깃값이 오르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동절기를 지나서 전기에 대한 수요가, 피크가 조금 줄어드는 분야여 가지고 저희 상황은 조금 더 여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상황이 지금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LNG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예의 깊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언주 의원 제가 볼 때는, 아까 원유 수송관을 제가 보여 드렸지만 그 수송관도 좀 다변화해서 아까 그 가로선 말고도 세로선이라든가 푸자이라 옆쪽으로 뻗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 개발하는 것 비롯해서 중앙아시아 또는 미국 서부의 LNG 터미널이나 여러 가지를 리스크 해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맞습니다. 저희가 원유만 다변화한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원유 수송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여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바야흐로 에너지안보, 경제안보, 공급망 전쟁, 각자도생 시대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만큼 주고받는 동맹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 미국은 경찰서 문을 닫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떠나는 중입니다. 냉엄한 현실 속에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자주 국방도 바로 우리 눈앞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자주 국방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곧 산업이고 산업이 경제고 안보이고 우리의 생존이고 전략입니다.

세계 패권국은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고 당하고만 있으면 어찌겠습니까?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물음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柳榮夏)

(14시56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柳榮夏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유영하입니다.

중동 전쟁이 한 달간 지속되면서 소비심리는 둔화되고 휘발윳값을 시작으로 물가도 들쭉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현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수 의식을 가진 여당이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배제와 말살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정치는 미래를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오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국가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75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조업 전반과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경제안보의 핵심축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단순한 기업 투자나 지역산업 유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안정성과 회복력을 함께 관리해야 할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柳榮夏 의원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이 수도권과 그 인접 권역에 몰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반도체 생산량의 80.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위치한 충청권까지 합치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메모리·파운드리 반도체 핵심 생산 측은 용인 기흥과 화성 그리고 평택에 자리하고 있으나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적되는 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는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한 번 흔들리면 자동차나 전자나 방산, AI 등 수많은 산업으로 충격이 확산되는 최상류 산업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OECD도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을 분석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매우 상류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수의 다운스트림 부분으로 빠르게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반도체가 집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인에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6기가 국가산단에 구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산단에 SK하이닉스 4개 산단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한 군데가 흔들리면 그 여파가 자동차, 전자, 방산, 데이터, AI센터 전체적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반도체가 멈추면 연쇄 섯다운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정전 또는 지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핵심 제조업이 한꺼번에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최대 회사입니다. 대만의 핵심 반도체 팹 분산을 보면 북부 신주를 비롯해서 중부 타이중, 남부 타이난, 가오슝으로 분산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미국 애리조나나 일본의 구마모토에 복수 거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TSMC는 이렇게 분산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세계 선도 파운드리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반도체 생산시설을 여러 거점에 나누어 배치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 세력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군사력이 우리나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전술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배치하면서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170mm 자주포나 240mm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54~65km 상당 되고요, 300mm 방사포는 최대 200km 사정거리입니다. 더군다나 2019년도에 배치했던 400mm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격거리가 250km에 달합니다. 서울은 물론 인근 용인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총리, 이번 중동 전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미국 ICT나 AI 기업 18곳을 합법적 타격 목표로 지정한 걸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柳榮夏 의원 실제로 바레인의 아마존 클라우드센터나 두바이의 오라클 데이터센터 등 미국의 빅테크 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에 구축되는 10개의 반도체 팹이 만약에 유사시에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한 번에 섯다운될 수 있다는 위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효율성은 계산했을지 몰라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비록 이것이 지난 정부에 확정된 계획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는 게 저는 현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팹의 남부권 분산 이전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경제안보가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전략자산의 분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가 워낙 큰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현재 반도체에 기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그 이후에 또 추가 신규로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추가 신규로 앞으로 새롭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전체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부분이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기존 이미 현재 확보되어 있는 부분과 계획에 대해서는 결국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몫이지만 저희는 큰 방향에서는 의원님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柳榮夏 의원 맞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이전의 문제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이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의 지정이나 전력과 용수계획, 도로와 인허가, 각종 기반시설은 결국 정부가 승인하고 지원해야만 실현되는 사업입니다.

PPT 5번을 띄워 주세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화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인 삼성반도체 팹 6기에 필요한 전력은 9GW인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예.

○柳榮夏 의원 제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을 보니까 3GW는 LNG발전소로 충당을 한다 그리고 3GW는 한국전력과 협의 중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3GW는 전력수급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단계에 걸쳐서 2035년까지 107만t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135만 호 중에는 재개발·재건축 36만 5000호를 제외하면 98만 5000호의 신규 주택이 건축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생활용수는 일일 평균 55만t입니다. 그러면 정부 계획대로 용수가 확보되더라도 이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나면 나머지 반도체 산단에 들어갈 용수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력이나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 저는 전체를 백지화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계획의 변경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력계획이 확보되지 않은 이 반도체 팹 4기 정도는 남부권으로 분산 이전하는 게 이 정부의 지산지소 원칙에도 맞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와 상생하는 정책에도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용수와 전력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사실 경청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점점점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柳榮夏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성 위원회에서 반도체 팹의 분산 배치를 국가 전력자산의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柳榮夏 의원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TK 신공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의 2026년 올해 예산이 10조 7000억입니다. 이 군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조 5000억이고요,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3조에서 15조 정도 됩니다. 도저히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공항은 국가사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께서 지난해 6월 25일 날 광주 가서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서 대통령실 산하에 정부 부처와 지자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라’. 대통령 지시가 있자마자 TF가 구성되고 급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4월 2일 날 광주 군·민간공항 예비후보지로 무안군이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생각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柳榮夏 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무안 주민 설명 당시에 지원사업비 1조 원 플러스알파로 지원하겠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 TK,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작년 10월 24일 날 타운홀미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방은 국가사무니까 국가 주도의 건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다시피 K-2 공항은 우리나라 11전투비행단을 비롯해서 공군전투사령부, 군수사령부, 미 7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연합 공군의 핵심 국가안보시설입니다. 이런 군 시설을 지방정부 재정으로만 감당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자기금을 신청해서, 이게 뭐냐면 토지보상자금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공자기금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 절차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 대구경북공항 출범은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는 이렇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광주와 대구를 너무 차별하지 않냐, 왜냐하면 대구의 군공항 소음피해가 광주보다 더 심각하고 사업 추진도 대구가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은 멈춰 있습니다. 이러니까 대구·경북 시민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이행시킬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대구시장후보로 선출되신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 TK 신공항에 대해서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어느 특정 인물의 당선을 전제로 지원을 논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먼저 해결해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가 아닌 지금 바로 정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는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고 노후된 군사시설의 현대화, 국민의 안전과 국가균형발전이 총체적으로 걸린 중대한 국가사업입니다.

지금도 소음으로 많은 대구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국가 차원의 TF팀 구성과 국가재정사업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상황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의원님의 어떤 열정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대구시민들의 걱정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재정 하는 방식으로 바꿨을 때 시간이 다시 또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 고민이 해결 안 되는 지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柳榮夏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걸 다 종합해서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방안을 찾겠습니다.

○**柳榮夏 의원**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우원식** 유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오기형)

(15시12분)

○의장 우원식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의원 기획예산처장관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동 사태로 3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위기 또는 경제 충격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이거 선거용 추경 하는 거 아니냐 또 무슨 중국 추경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결코 선거와 관련이 없는 무관한 추경입니다. 그만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고 앞으로도 그게 얼마나 더 커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다는 심정으로 추경을 긴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라든가 KDI 또 조세연 이런 데에서도 모두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알다시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하여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전쟁 핑계로 중국 추경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코스피 상승할 때도 중국 불법 자금을 해서 코스피 상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재부가 설명하면서 각 나라별 투자 이런 걸 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약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설명을 즉시즉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정부 차원에서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가 다른, 특히나 정치적인 어떤 공세나 이런 차원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대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기형 의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 23일 IEA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상황을 3월 23일 시점에서 봤을 때 70년대 오일쇼크 두 번 그리고 22년 러·우 전쟁, 그로 인한 충격을 합쳐 놓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IEA 사무총장 이야기였고, 4월 1일 IEA·IMF·월드뱅크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세계 에너지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역대 반세기 만에 겪어 보지 못한 에너지 공급망 충격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을 중동에서 70%, 가스 수입 30%, 나프타도 한 71% 정도 수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딱 막힌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의원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월 20일까지인가 배가 왔던 거고 그 뒤로 배가 온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동에 워낙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그 외에 또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제가 브렌트유 가격을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에 140달러를 한

번 넘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133달러 정도가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141.3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보통 비상한 시기, 정말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상한 상황인데 이 지점에 대해서 온 경제 주체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 그 점을 놓고 그때그때 왜 지금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께 충분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설명을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다 소상히 국민들께 설명을 하겠고요.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석유파이가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5조 추경이 없었다면, 즉 최고가격제와 같은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30%대까지 뛰어올랐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석유파이만 오른 것이 아니라 석유류 가격이 30% 올랐을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예측된다고 하는 물가 전문가의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백방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저도 이것 자료를 보니까요, 오늘 체크해 보니까 두바이유가 아마 전쟁 전 대비해서 한 61%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 유가는 주유소 최고가격제 때문에 14% 인상된 걸로 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한 거지요. 그 차액이,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부담을 이번 추경에 빨리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난주에 여천산업단지를 갔습니다,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끼리.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생각보다 추경이 빠르다, 지금 빨리해 줘야 된다, 바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기업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지점에서 함께 국민들께 설득을 하면서 국회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완화도 있고, 그래서 석유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또 시장 왜곡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두바이유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유사의 공급가를 살펴보면 전쟁 전 대비 휘발유는 한 8~9%, 경유는 한 14~15%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보면, 특히 소비자들의 소매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게 낮은 걸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한 8.2% 정도, 2월 네 번째 주와 3월 셋째 주로 이렇게 상승률을 본다면 미국은 31%, 일본은 한 17%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지금은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추경의 처리와 집행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추경의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기형 의원 예.

지금 현재 이 에너지 공급망 충격 때문에 2.1%로 예상했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1.7%까지 하강할 수 있다, 이게 OECD 최근 발표예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3월 말에 OECD가 그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신속한 추경과 또 경제 전반을 얼마나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게 방어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는 최근 추경의 효과를 정부도 그렇고 여러 연구기관이나 또 외국의 기관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0.2%p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연구원 관련 자료를 여러 가지로 들어 보니까요 지금 중동 상황에 대해서 이게 장기화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시나리오가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돼 있고 단기는 1개월 안에 끝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중기는 1개월 이상~3개월 그다음에 장기는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럴 경우인데 지금 추경은 얼마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추경은 한 3개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지금 추경과 관련된 최고가격제의 버퍼 작용을 하는 예산을 한 6개월 정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예산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오기형 의원** 지금 자원안보와 관련해서 위기경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심·주의·경계·심각? 그런데 지금 관심 단계 넘어서 주의, 주의 단계 넘어서 지난주에 경계까지 갔어요. 그러면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가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난번 저희들 4월 2일부터 경계 단계로 올렸는데 지금 중동전이 저희들이 생각한 한 달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석유의 수송 경로에 차질도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석유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경계 단계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지금 중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황을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 장기화될 걸 염두에 둔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섬세하게 실제 촘촘히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1단계·2단계·3단계에 걸쳐서 3단계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공급망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요 관리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요 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일단 공급망 차원에서 석유에 대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문제 플러스 그다음에 이게 아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때는 수요

관리하는 방안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계 단계로 오면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4월 6일부터 2부제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는 5부제로 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상황별로 보면서 조치를 높여 나갈 단계로 있고 다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지금 원유 가격이 아까 140달러 넘어간 사례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150달러 이상 넘어가거나 또는 2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공급망에 충격이 크고 에너지 수급 전체가 큰 교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선제적인 수요 관리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부처별로 상황별로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의 러·우 사태와 관련된 화면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 내용이 뭐냐면 2021년도와 2022년도 거의 비슷한 물량이 들어왔는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3대 에너지 품목의 수입액이 1165억 달러인데 1827억 달러로 바뀝니다. 실제 이 당시에는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가스 가격이 2배, 전체 국가적으로 무역수지에서 에너지 수급 때문에 가격이 폭등해서 그 한 해에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2배가 되는 에너지의, 약 1000억 달러 좀 못 되는, 여기는 한 육백몇십억 달러인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실제 이에 따라서 올해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 따른 대한민국 에너지 수입액이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판단해 봤는가. 두 번째, 그래서 각 분담한, 경제 주체별로 어떻게 분담해야 되는 것인가. 즉 최고가격제로 정부가 분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기업이 분담해야 될 것이 있고 가계가 분담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그중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해소할 대책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섬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또 나오는 게 한전이나 가스공사 적자 문제가 있어요. 그 부담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일차적으로 딱 정부가 담은 부분은 추경이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보조를 통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최고가격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류에 대한 정책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또 나프타 같은 경우는 민간이 수입했을 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도 정부가 보조를 하는 부분이 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석유류 가격이나 LNG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아마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전 같은 경우도 부채가 지금 200조가 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가가 올라갔을 때 전기료로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한전의 자구노력 그리고 또 수요를 줄

이기 위해서 원자력의 가동률을 높이는 거라든지 또는 석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쪽에 상대적으로 가동률을 높이는 거라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최대한 확대해서 쓰고 낮 시간 동안에 썸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위기를 국민·기업·정부가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정책적 모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그렇다면 그거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하나는 수요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대응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게 있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기형 의원 그다음에 공공을, 여러 가지 함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거겠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의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또 건의할 게 있습니다.

K-패스에 관한 겁니다. K-패스는 이미 또 여러 분들이 같이 논의하셨겠지만 K-패스를 공공에서 쓰는…… 공공에서 대중교통을 많이 쓰게 하자, 자가용 줄이도록 할인해서 K-패스에서 정률제에 대해서는 일부 할인폭을 넣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넣었습니다.

○오기형 의원 정액제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정액제를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서울시도 그걸 반영을 해서 좀 풀겠다고 제안을 하고 일부 추경에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서울시와의 관계 때문에 논쟁에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 정부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정부의 적극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오기형 의원 국회에서도 저희도 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기후에너지부장관님이랑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전체적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의원 그와 관련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끼리 내부 논의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방향을 이번 시기에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긴 호흡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루어 내는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획을 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대통령님 주재로 해서 저희들 전환에 따른 부분을 논의했고요. 6월 달까지는 GX 전환에 따른 종합 플랜을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액션해서 하나하나 이런 위기에, 이런 석유 위기가 닥쳐

왔을 때 저희들이 우리 경제는 거기에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벌써 착수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고맙습니다.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추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건의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서 나프타 수급안전 관련 차액 보전액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차액 보전액 반영 비율이 한 50% 정도라고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어떻겠냐, 한 80% 정도로. 그런 제안이 있고요.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보전 대상을 나프타에 한정할 게 아니라—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니까—나프타는 수입과 관련된 대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기초유분과 중간제품까지 확대하는 제안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방향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예, 국회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함께해서 안을 좀 더 조정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오기형 의원 또 하나는 아까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이번 상황 속에서 어떤 충격을 입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응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의원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정기국회 때 한 번 더 논쟁될 수 있는 주제여서 그래서 이걸 선제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수요 관리를 위해서 가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를 설명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기후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계획 발표를 하셨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국민들 앞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화석연료를 그만 쓰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대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핵심인데요. 또 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기국가 얘기도 나오고요. 석유국가·전기국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은 재생에너지를 임기 중에 100GB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그걸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태양광을 대폭 늘리는데 햇빛소득마을을 포함해서 산업단지의 공장 태양광도 입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넓은 공장은 아예 신축할 때부터 태양광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요. 영농형태양광도 물론 늘려 나가고 또 풍력도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대폭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돈분이나 우분도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화하려고 하고요. 또 탈탄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줄이는 방안 또 그와 관련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등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가스를 쓰고 있는 열 분야는 그동안 통제가 잘 안 됐는데 실제로 에너지 최종 소비의 48%가 열입니다. 그래서 그 열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열을 전기화하는 도구가 히트펌프인데요. 수열이나 공기열 히트펌프를 대폭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AI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녹색 제조 분야도 세계 3강을 목표로 해서 차세대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 분야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요. 특히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탄소배출이 많은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중동 전쟁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전기차 전환 속도도 그 속도를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뭉텅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LPG 택시나 렌터카나 법인차나 경찰차 같은 경우도 빨리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려고요. 그밖에도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이런 것도 전기화 속도를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관련된 녹색금융이나 재정도도 키워 나가려고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대규모 원전이나 화력발전하고는 좀 달라서 전력망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차세대 전력망인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바뀌 나가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요금과 시장체계도 바꾸고요 또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소득은 가급적이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도록 해서 특히 햇빛소득이나 바람 소득이나 또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계통소득이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했습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가급적 조기에 추진해서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니까 속도를 좀 더 내서 조기에 소위 화석연료 중심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국가로 빨리 전환해 보자, 속도를 더 내 보자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기형 의원 제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위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를 보니까 독일이었고 독일이 그때 몇 년 동안 태양광을 급속도로 확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오기형 의원 특히 제조업이 강한 나라였고 우리도 제조업이 강한 나라인데 이번 에너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 한 3년 정도 잡고 뭔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하고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을 키워야 하고 그 성과가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4대 원칙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이번 추정 관련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베란다 태양광 이야기에서 정부안이 중앙정부 25%, 지방정부 50% 그다음에 가계가 25%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비율 좀 조정을 해서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면 안 됩니까? 이걸 계속 이 비율을, 입장을 유지할 거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의회에서 협의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아무래도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으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를 두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기형 의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이야기를,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정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의원 고맙습니다.

금융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이번에 설정한 것 이유와 로드맵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계부채 총량관리 DSR 80%. 그다음에 생계비 계좌와 관련된 구체적인 겁니다.

먼저 최근에 발표하신 것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소프트랜딩 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총량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량관리를 이번에는 1.5%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합니다. 지금 경상성장률이 요즘 바뀌기는 했지만 금년에 사실 연초에 보면 4.9%, 경상이 그만큼 오르는데 가계부채는 1.5%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p나 1.5%p 정도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지금은 또 가계부채를 가계부채 총량만 관리하고 그 내의 주담대는 별도로 따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그 주담대도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이고 대신 그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 같은 경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햇살론 대출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서민들한테 주름지는 부분들은 완화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 가계부채가 80%가 넘어가면 그로 인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BIS(국제결제은행)에서는 80% 이하로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 안 했습니다. 그전에 금융위가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계속 비판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80%를 발표하셔서 이것을 꼭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목표를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수 위축 효과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계비 계좌입니다. 생계비 계좌가 2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당연히 민사집행법도 처리되고 또 관련 법이 처리가 됐는데도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생계비 계좌 무용론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250만 원 초과되는 부분을 금액을 하게 되면 전액이 튕겨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무부는 별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집행하려고 보면 금융위나 은행들이 이것을 제대로 안 해서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금융위에서 챙겨 주셨으면 싶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오기형 의원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운 분들한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50만 원, 25만 원 이것 때문에, 압류 푸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 법무사비용 때문에 한탄스러워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기술적으로 조금만 풀어 주면 될 것인데 계속 튕겨 나온다고 민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잘했던 것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의원님이 주관이 돼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취지가 잘 구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은행권이랑 법무부 등 관계 부처랑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의원**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학영** 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수영)

(15시38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부산 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 출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유가의 3고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란 사태 때문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국무위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현안부터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께서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유조선을 빼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아닙니다.

○**박수영 의원**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기사가 잘못된 겁니다.

○**박수영 의원** 잘못된 기사였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박수영 의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유가로 인한 피해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크고 있는데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셨지 않습니까? 최고가격제 도입할 때에 대통령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신 사항인가요?

○**국무총리 김민석** 대통령님과 또 관련 경제 부처 장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 대통령께서 중동 사태가 시작한 3월 1일부터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밤에 귀국을 하셨고요. 5일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최고가격제 시행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의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희가 SNS를 통해서 사실은 거의 24시간 소통이 됩니다.

○**박수영 의원** 그렇군요.

○**국무총리 김민석** 문제 제기도 하고 기사도 놓고 의논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번 문제를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등등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다 얹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수영 의원** 대면해서 직접 논의는 못 했지만 SNS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지는 못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 그런데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봤더니 6일 날 논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어떻게요?

○**박수영 의원** 6일 날 논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 김민석** 그건 누가……

○**박수영 의원** 5일 날 국무회의를 했는데 6일 날 논의를 했다 그러면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 김민석** 누구의 답변이었나요?

○**박수영 의원** 경제부총리한테 제가 전체회의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누구의 답변이었나요?

○**박수영 의원**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김민석** 글썄요. 그것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논의를 하는 게 대통령실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정책실 경제수석도 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재경부 외 산업부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십시오.

○**박수영 의원** 전체회의에서 물었던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총리님 말씀대로 이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라 정부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이렇다면 더 실망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97년 유가자율화 조치를 한 이후에 최고가격제는 도입한 바가 없었습니다. 전부 유류세 인하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것은 좌파정부·우파정부 상관 없이 모두 그렇게 대응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모두 유류 인하 이것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게 유류 인하가 아니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셨습니다. 어떤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유류세 인하가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다면 시장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강도에 있어서도 조금 덜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로 드신 그 이전, 김대중 정권 때부터를 예로 드셨는데 그때는 사실 이번에 준하는 정도의 일종의 에너지 쇼크 내지는 그런 위기로 볼 상황은, 그렇게

비할 상황은 아니었지 않은가. 그것은 오히려 그 이전 70년대의 중동 상황과 비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그때와 비교하는 것은 꼭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전쟁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도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한편으로는 시그널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을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그 전제로서는 고통에 대한 분담도 되어 있는 것이어서 유류세 인하만으로 충분했을까 또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까지를 다 종합하는 것이, 소위 그런 정책 믹스가 더 바람직한가 그것은 의원님께서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조기에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내놓는 방식을 취한 것이고 어쨌든 국민의 어떤 심리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유류가를 일정하게 안정시키는 데는 일정한 초기적 효과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깊이 생각하겠고 또 일부 예견되는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기에 조금 더 강한 정책들을 믹스해서 썼다, 그런 선택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도 또 비판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극단적인 최후 수단이지만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박수영 의원 그런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또 제가 구윤철 부총리께 질의를 했는데 유류세를 인하를 해도 일부 주유소에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주유소들이 대응하지 않을까 봐, 호응하지 않을까 봐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유류세 인하를 해도 그 가격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박수영 의원 안 내리고.

○국무총리 김민석 일반적으로 다운시키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예측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만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조금 더 전체적으로 정책의 일관적 반영 효과를 더 의도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부총리께서 그렇게 설명은, 일단 부총리께서 그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꼭 그것만이 어떤 전체 이유의 메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수영 의원 총리님께서 일반적인, 일관적인 반영 효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일관적인 반영 효과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유류세 인하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를 들면 이 주유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대구에서 나왔던 건데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더 싼 곳에 가서 주유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등포에서는 새치기 때문에 손도끼 사건까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류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든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를 하든 주유소들은 순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혹시 안 하는, 담합을 한다든지 더 받는 데가 있다면 그 몇 개를 단속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각각 조금 다른 문제지요, 사실 담합의 문제는 또 그것은 그 자체로 핀셋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단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희가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한 후에도 당연히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희도 이것의 효과 또는 어떤 부작용 또는 언제까지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떤 상황에서 조금 상황 변화가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를 맡겨서 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물을 테니까 이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유사들이 손실 떠안으면서 최고가격제에 지금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유사들?

○국무총리 김민석 예.

○박수영 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그러면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손실을 계산하게 되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을 지금 수치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수치와 관련된 것은 오히려 관련 장관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그거는 어떤 산식을 쓰느냐는 좀 봐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지금 나프타의 경우 이런 걸 보면 실제 가격과 또 그 이전의 평균 가격을 봐서 그 차액 중에 일정 부분을 국가가 지원한다, 가령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가격제로 했을 때 손실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한 손실은 그 원가를 무슨 원가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아주 디테일은 관련 장관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 장관께도 여쭙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유사들의 불만은 대단히 많습니다. 원유가 원가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 가격, MOPS라고 하는 현물 가격으로 거래를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원가를 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손실을 자기들이 다 떠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정유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연구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그거 외에도 각종 품목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들하고 통화도 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직 생활을 해 봐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해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통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 쪽이나 산업 쪽에서의 어떤 그런 우려들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만 돼서 어떤 불만을 억누르는 것으로만 이해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우리가 충분히 듣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냥 압박하고 누르는 것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좋은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행정을 저도 30년 이상 했습니 다마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 농가 5만 곳이 있는데 5만 곳 이걸 다 지원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사 실 면적에 따라 할 건지 사람에 따라 1인당 얼마를 줄 건지,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 라 줄 건지, 유류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줄 건지, 여러 가지 기준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현장의 공무원들은 매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업인도 마찬가지로 열 척 을 가졌는데 유류값이 비싸니까 조금만 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이들을 어 떻게 계산해서 실제로 보상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최고가격제의 시행이 행정력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유류세 인하 이걸 하게 되면 농민이든 어민이든 또는 자영업자로 한 대의 트럭을 운용하는 사람이든 전부 싼 가격에 석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면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고가격제라는 통제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 행정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식이 행정력의 부담을 좀 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해 주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부작 용을 최소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30%로 되어 있는데 30%, 50% 인하하면 기름은—지금 슬라이드가 나오고 있습니 다마는—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휘발유가 30%를 인하하면 1652원, 50%를 인하하면 1505원이 돼서 3월 1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고 세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수를 대략적으로 제가 그 세수감을 추정해 봤는데 30% 이상 인하를 하면 4 조 원 정도 세수가 감이 생기고 50%를 하면 6조 원 정도 감이 생기기 때문에 26조 2000 억이라는 큰 추경이 없이도 상당 부분이 커버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연구한다고 하셨으니 다시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저 수치까지 포함해서 연구하고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고유가 더 위험하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가 고환율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우리 환율이 98년도 IMF 구제금융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보다 잘 아시지만 환율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관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고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고, 그 이유 는 최근의 상황으로부터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면 해외투 자에 대한 확대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고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초기에 저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지금 다른 지 표로 인해서 상징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볼 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꼭 올라가야

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좀 대부분이 아니었는가.

가령 의원님께서 이게 이재명 정부 이후에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 후기, 말기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경제가 왕창 더 망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가지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라는 점에서 비춰 본다면 이재명 정부 초기를 포함한 시기에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그 수요·공급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이고 겸허하게 지켜보면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유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런 수급상의 문제로 보고 대책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아까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봐 주시면 작년도 7월 21일 날 소비쿠폰 13조 원이 살포됐거든요. 그 이후에 M2가 많아지니까, 우리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었지만 M2가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그게 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장중 최고를 기록한 것이 3월 31일인데 153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 소비쿠폰을 풀고 추경을 하게 되면 2025년 7월 21일처럼 다시 환율을 올리는 M2의 증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유동성 M2를 주인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것 같고요. 환율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유동성 문제도 분명히 하나의 요인으로 우리가 통상 이론적으로도 보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간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드러나 있는 것만으로도 저 문제만을 주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그러나 그런 M2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원인에 있어서의 비율인가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이 M2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 급속한 환율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봐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작년 2월에 ‘환율이 7% 올랐을 때 우리 국민 전 재산 7%가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환율 1445원이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면 국민 전 재산 날아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지요. 사실 새 정부 들어온 이후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비교적 긍정적인 지표들이 쭉 많이 있는 중에 추세로서 제일 부담스러운 지표가 환율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올랐을 때 가령 해외에 유학을 보낸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든가 또는 경제활동 중에서도 환율이 올랐을 때 부담을 갖는 분들이 갖는 부담은 뭐 말할 수 없이 큰 압박인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환율이 몇 %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게 한 1200에서 1500대로 갔으면 계산을…… 몇 %가 되나요?

○박수영 의원 13%가 올랐습니다. 7% 올랐을 때 재산이 7% 날아갔다고 하셨으니깐 13%가 오르게 되면 국민 재산 13%가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주목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영 의원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겠지요? 지금 고물가 상황 맞겠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예.

○박수영 의원 우리 물가가 너무 비싸다, 국민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OECD에서 물가는 1.8%에서 2.7%로 더 오를 거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성장은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3월 달에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한 0.4% 다운시켰더라고요.

○박수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게 2.1%에서 1.7%로 0.4%p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에 우리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항상 백 투 더 베이시스(Back to the Basics)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수요·공급 곡선으로 한번 봐 보겠습니다.

물가 수준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데서 결정되는 저건 경제학 101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보셨을 텐데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26조 2000억은 저 노란색 선, 수요 측면의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수요 확장 정책입니다. 수요 확장 정책을, 수요 증가 정책을 쓰게 되면 물론 GDP는 좀 늘어나겠지요, 아까 0.2%라고 박홍근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렇지만 물가도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고 성장은 떨어지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것인데 성장을 시키려고 하다가 물가상승을 가져와서 민생에 더 어려운 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선진국 국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아까 연구도 하고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봐 주시면 수요 증가책, 26조 2000억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공급 증가책을 써야 됩니다. 공급곡선이 이전하니깐 GDP도 늘면서 물가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supply side economics)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반성도 있고 우리가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플라이 사이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급이 늘 것인가? 기업이 즐겨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즐겁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니까 세금도 깎고 규제도 완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갑자기 대학 때 경제학 배울 때……

○박수영 의원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표를 보여 주시니까 갑자기 기억이 새롭습니다마는 저것이 설명하는 취지를 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이 성장이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가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초기 단계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중동 상황으로 생긴 직전의 상황이 사실 물가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성장률이 그 이전 윤석열 정부 후기에 비해서 올라오는 상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는 이 정부가 썼던 여러 가지 성장 정책과 규제 완화 그리고 기업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 국민적인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이 반영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것을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나 단계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성장이 회복되면서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성장의 회복 가운데 중동이라는 외생변수에 의한 급작한 일시적인 변동으로 일단은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오히려. 그것을 지금 이 시점만 놓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저는 분석을 잘라서 보는데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영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경제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주식, 즉 주가지수 이외에는 별달리 발전한 게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많은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남근)

(16시02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서울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바닥에 떨어진 경제를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재정을 투입한 경기진작 정책,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신산업 육성 정책, 여러 적극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최근에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유 산업이나 석유화학 산업에 가격을 정하지 않고 사후 정산하는 것과 같은 전근대적 방식의 거래구조가 남아 있다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함과 함께 산업 구조조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님, 제가 국회에서 원내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중소기업들도 많이 만났고 주유소업체도 만났고 세탁업체도 만났고 인쇄업체도 만났고 많이 만나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합니다. 일단 각종 플라스

텍 재료인 합성수지 가격도 크게 올랐고 인쇄 잉크도 많이 올랐고 종잇값도 앞으로 올린다고 그러고 하다못해 세탁소에 있어서 솔벤트라고 하는 세탁용제 가격이 다 오른다고 그러합니다. 또 가격을 올리려고 하니까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될까 상당히 두렵고 또 소비 위축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뭘 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권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있고 시장에 맡긴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들은 확실한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은 시장에 맡겨 놓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근 의원 추경의 필요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면 물가가 오른다, 환율이 오른다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질 때도 경기가 활황일 때 재정을 투입하면 물가가 오르고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기 하락 국면, 경기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어 재정 투입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GDP 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다가 이번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했다면 그런 부분이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초과세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근 의원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는 또 물가 자체를 낮추기 위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최고가격제도 그런 것들이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의원 농수산물 할인이라든가 공연·영화·숙박,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소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문화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김남근 의원 관광 분야에 있어서 소비를 진작하고 또 가격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야당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나 문화산업 정책 같은 것들은 추경으로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추경에 부적합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가 외부 충격으로 급하강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업들이 청년들의 취업 문을 닫아 버리고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게 되니까 이런 때야말로 오히려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 창업 정책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계층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의 쉬었음이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하에서 또 대외적인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에 따른 다른 모든 물가 전이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 대책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남근 의원 특히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위기 상황에 부딪쳐서 좌절을 맛보게 되면 장기적인 쉬었음 청년이 되거나 은둔·고립 청년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바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계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추경에다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또 이렇게 어려운 시점이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소비 중의 하나가 문화 소비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남근 의원** 공연이나 영화 이런 걸 보지 않게 되는데 사실 우리 영화인들이나 예술인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이럴 때 조기에 대응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한류 산업, 세계적인 문화 3대 강국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화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술인들이 특히 K-컬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외부 충격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그런 위기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추경 항목들이 저는 그래서 다 필요한 부분들이고 제때 추경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의원** 다음에는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보니까 우리 정유업계의 산업구조, 거래구조가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소위 사후정산제 거래 방식입니다. 처음에 사전 통보를 할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불러 놓고 뒤에 한 달 후에 정산을 할 때는 좀 깎아 주는 방식, 그런 방식의 거래들을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주유소 입장에서 어떻게 정산이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 비싸게 팔아 놔야 자신이 적자를 안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거래 방식이지요. 또 가격을 정하지 않고 거래를 하고 사후적으로 정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전근대적인 거고 이것은 결국은 정유사들이 그런 시장에서의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월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거래구조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유소 업체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원유가 60달러일 때 갖고 온 원유를 가지고 정제를 해서 휘발유·경유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국제가격이라고 하게 되면서, 국제가격은 장래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니까 장래를 반영한 건데, 아직 110달러짜리 원유는 중동에서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110달러짜리 원유를 정제한 것처럼 비싸게 파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속거래제도 문제입니다. 전속거래라는 것은 뒤에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유형 중의 하나예요. S-OIL 이런 식의 간판을 달았다고 그래서 그 업체 것만 100%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경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어떨 때는 S-OIL

게 아니라 현대오일뱅크 게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구입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한 업체 것만 100%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더라도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시정을 해야 된다, 이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확정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또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공시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유회사에서 판매한 가격이 이번 주에는 좀 싸게 공급이 됐겠구나, 그러면 그 주 유소 같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좀 거래구조를 개혁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었던 게 확정 가격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최고가격은? 그리고 2주 단위로 가격을 조정해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천천히 올리잖아요. 이게 주유소 업체들이 얘기하는 시차제 가격제로 확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영된 건데 문제는 위기 상황이 와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최고가격제가 해소된 이후에는 다시 전근대적인 사후정산제나 전속거래제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의원님 말씀에 진짜 공감 많이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저희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됐었습니다. 국제가격,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선반영해 가지고 하는 그런 이슈들의 한계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고가격제를 도입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정산제라든지 전속계약제 이런 이슈들이 의원님께서 너무나 더 잘 아십니다마는 주유소와 정유소 간의 관행 그리고 말씀하신 정유사들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지금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가 나오면 주유소들의 이해관계, 정유소들…… 주유소가 또 한 1만 개가 넘는, 여럿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를 잘 조절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우리나라에 좀 더 적합한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덜한 가격을 만들어 내는 데 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이 위기 상황들을 그냥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 참에 정유산업과 주유소 업계 사이에 있어서의 거래구조도 현대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의원**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업계, 소위 말하는 나프타를 공급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합성수지 같은 플라스틱 재료를 만드는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석유화학 업계와 플라스틱 소재로 여러 제품을 만드는, 포장용지도 만들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그런 내구성, 박스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남근 의원**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마찬가지로요. 가격을 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전통보를 하고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시

작하자마자 바로…… 합성수지가 톤당 154만 원에 전쟁 전에 거래됐었는데 3월 초에 바로 80만 원을 올려 달라, 톤당. 50% 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남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도 개입을 하고 저희 국회에서도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많이 설득도 하고 그래서 3월 말에는 다행히 한 20만 원 정도 올렸는데 20만 원도 사실은 톤당 154만 원으로 따지게 되면 한 15~20% 올린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4월 초에 60만 원을 올리겠다, 그러면 3월하고 4월 것을 합치면 80만 원 아니에요? 50%를 올리겠다 그러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가격을 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이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항상 위기가 극복되고 난 다음에 보면 대기업들은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얻었는데, 성과급 잔치를 하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몇 년 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적자를 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래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전근대적인 사후정산제를 극복하는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 좀 잘 마련해 주시고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근 의원 다음에는 중소벤처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부장관님, 이렇게 위기 시에 갑자기 원재료 가격들이 크게 오를 때 중소기업들로부터 제품을 납품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그것과 연동해서 납품대금을 올려 주는 제도, 그게 납품대금 연동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의원 다행히 제도가 미리 만들어져서 이럴 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위기 시에 한번 작동을 하는 시범을 보여야 되는 시기잖아요.

중소벤처부에서 한번 조사를 하셨지요? 플라스틱 업계하고 그걸 사 주고 있는 식품 업계 사이에서의 납품대금 연동제 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의원님들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도 사실 중소기업계의 심각성을 보고 조사를 했는데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관행적으로 맺어지지 않고 있거나 맺어졌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좀 찾아졌습니다.

○김남근 의원 공정거래위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중소벤처부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납품대금 연동제는 먼저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 약정을 할 거냐?’ 이렇게 서면으로 교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모르고 안 했다는 것은 대기업이 그 서면 교부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의원 바로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 다행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가 좀 까다로워요, 요건이. 3개월 치 평균에 비해서 얼마 이상으로 올라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비상상황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도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줘서 스타벅스, CJ, 농심, 농협 이런 데들이 납품대금 연동

제를 반영해서 가격을 조정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중소벤처부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저희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3개월 단위나 이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습니다.

○**김남근 의원** 다음,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가 급등이라는 위기상황에서 대기업들은 이걸 기회로 이용해서 그런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취하고 중소기업들은 이 위기상황을 그대로 다 떠안고 소비자들은 다 떠안아 가지고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소비가 위축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근 의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이 이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의 폭리를 취하는지, 담합을 하는지 이런 것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지금……

○**김남근 의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안 하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안 하는지 한번 다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예, 그래야 합니다.

○**김남근 의원** 됐습니다.

위기는 또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기이기도 합니다. 단지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참에 우리의 전근대적인 산업구조·거래구조가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혁에도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학영** 김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선교)

(16시19분)

○**부의장 이학영** 다음은 경기 여주·양평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의원**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중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한다는데 언제 착공, 준공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타당성조사를 새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26년 하반기 정도에 시작해서 진행이 되면 내년 말 정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선교 의원** 지금 당초보다 착공과 개통이 몇 년씩 늦어지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현재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총 2036년 완공이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오래……

○**김선교 의원** 2017년도에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기본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예타 통과가 당시 됐고 2025년도에 착공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31년 준공 예정이었는데 거의 4년이나 늦어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선교 의원**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누구 책임이라기보다는 일단……

○**김선교 의원** 장관님, 2024년과 2025년 정부안에 담겼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 얼마나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당시 용역이 끝난 걸 전제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2024년도에 61억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62억 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선교 의원** 당시 저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부 원안 유지를 촉구하며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 삭감됐습니다. 이것 누가 삭감했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5년 5월 3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우리 지역 양평시장에 와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왜 중단시키냐, 빨리빨리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 내용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그런데 올해 2026년도 예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 얼마 반영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삭감되었습니다.

○**김선교 의원** 빵 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선교 의원** 심지어 민주당 의원님조차 예결위에서 30억 원을 증액했는데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이것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뺀 거지요? 입으로는 ‘신속히’를 외치고 예산은 빵 원,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정부의 민낯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새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 취지를 위해서 했는데……

○**김선교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민주당 의원님들 일부가 양평을 찾아와서 이 사업이 멈춘 책임은 저희

국민의힘에 묻고 석고대죄하라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던데 이 사업이 멈춘 이유가 뭘니까?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 일방적인 예산 칼질, 잘 추진되던 국책사업을 오로지 정치적 제물로 삼아 발목을 잡은 거고 이것 민주당이 한 짓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의원님, 거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은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 또 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꾸 ‘특혜, 특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는 원안인지 대안인지도 모르고 있던 상태였는데 강하IC 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민주당 출신 양평군수가 지역 현안을 약속하고 국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녔던 때입니다.

또 언론보도된 것만 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 인근에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 일가의 땅이 약 3050평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입니까? 지금 대구시 출마한다는 김부겸 후보, 수정 노선 IC 인근에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강선우 의원에게 돈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 시의원, 변경된 노선 인근의 땅을 취득했습니다. 여기에 노종면 의원,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민주당 인사들이 수 킬로미터 노선 영역권 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줄줄이 양평 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부터 이렇게 의혹 투성이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논합니까? 이 정도면 민주당 게이트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김선교 의원 아니, 서울-양평고속도로하고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리고 그 어떤 확인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교 의원 우리 양평군민들이 간절히 기다려 온 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다른 의혹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김건희 씨 문제도 있고요.

○김선교 의원 그런데 최소한 사업 재개에 앞서 정치적 괴담으로 사업을 흔들고 6개월간 특검 하면서 뭐 나온 것 있습니까? 한번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여러 가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뭐가 나왔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어쨌든 당시 대통령 처가 일가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정부는 이 문제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0일 대통령의 지시로 사전타당성 용역을 제기해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의원 이것 우리 양평군민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수사과정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지 이것 군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양평군민이 안중에 있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 않겠고요. 다만 현재 타당성 용역 재추진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국회에서도 부기를 달아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다시 추진하라, 기존 용역을 해제하고. 그런 부기에 대해서……

○김선교 의원 근거 없는 정치적 무리수로…… 양평의 군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평의 잃어버린 4년에 대한 책임부터 좀 뼈저리게 통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동의를 할 수 없겠고요.

○김선교 의원 양평군민이 피해를 보는데 동의 못 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양평군민의 피해가 있는 건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전제로 한 양평군민의 피해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그러면 사업이 늦어진 만큼 대안으로 양평군민과 원하는 노선을 검토할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우리 양평군민과 그 도로의 본래의 목적·취지에 맞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선교 의원 좀 속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의원 들어가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고맙습니다.

○김선교 의원 장관님, 농어촌기본소득 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시행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시범사업 중입니다.

○김선교 의원 이제 고작 두 달 남짓인데 좀 어떤 효과가 나왔다고 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일부 평가에서는 인구 인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지금 매칭 비율 알고 계십니까, 국비 대 지방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김선교 의원 얼마입니까?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비 대 지방비가…… 지방비가 아마 30%, 40% 이렇게 돼 있어서 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장관님, 잘 모르시는데요 국비가 40%……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도비와 군비를 얘기한 겁니다.

○김선교 의원 도비와 군비가 30%, 30% 매칭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김선교 의원** 국비 50% 이상 지원 못 하겠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건 이미 시범사업이 그렇게 설계되어서 시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추경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기획처 검토의견을 보니까 법률로 국고보조를 규정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버젓이 적혀 있어요. 2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 검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라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게 전면화됐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속에서 확실히 본격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들어가시지요.

부총리님 나와 주세요, 경제부총리.

농어촌기본소득 이것 시범사업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그런데 검증조차 안 된 시범사업을 추경예산에 또 편성했어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전쟁 예산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의원님, 지금 농촌의 인구소멸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선교 의원** 49개 지자체가 소멸지역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김선교 의원**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점차, 그것도 도별로 이렇게 보면서 상황을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교 의원**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호남지역의—호남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세 군데가 올라왔는데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광역하고 또 기초하고 서로 비율 분담하는 것도 합의가 안 되는 지역은……

○**김선교 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국비 부담을 왜 못 늘립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도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교 의원** 지금 소멸되는 지역의 지자체는 매칭하느라고 SOC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상황을 보면서……

○**김선교 의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이, 지금 선거에 뛰기 위해서 지자체장이 출마하러 나갔어요. 그러면 매칭을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한 칠팔월 달, 7월에 취임하고 이래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예요. 10개 지자체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김선교 의원** 시범사업이에요. 그런데 굳이 전쟁 예산에 넣는 것은 뭐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빨리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김선교 의원** 그것은 경제부총리님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해 달라고 해 줘요,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건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다 해 줄……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그리고 위장전입과 인근 지역 간 인구 쟁탈전, 심야 방문점검과 통신기록 요구와 같은 과도한 행정, 지역화폐 사용 불편 등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점차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보완하면서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의원**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이게 경제 관련은 아니지만 반드시 보여 드려야 할 것이 있기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난 1차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돌아가셨던 양평의 고 정희철 단월면장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들었습니다.

○**김선교 의원** 지금 보시는 게 고인의 친필 유서입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를 봐도 ‘공포와 험한 분위기, 회유하고 무시하면서 시나리오를 짜 놓고 거기에 당했다. 강요에 의해서 없는 것을 내가 진술했다. 바보 천치인가 보다’.

총리님, 이 유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고인의 유서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또 수사와 관련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그 또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교 의원** 이게 안타깝다. 총리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정말 멀쩡하게 일 잘하던 분이 압박과 강요에 못 이겨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수사를 빙자해서 살인을 저지른 저들, 당장 잡아다 조사를 하든 처벌을 하든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바로 살인자예요, 살인자.

총리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에서 수사관들 고발, 수사 의뢰, 징계 등을 권고했는데 징계는커녕 최근 경찰 승진 자료를 보니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버젓이 승진 명단에 있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죽게 만들고 승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인의 유족이 특검 감찰보고서, 인권위 조사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는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알권리 차원에서 조속히 이것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김선교 의원** 지금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좋게 조성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제가 처벌을 받을 테니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제발 좀 불러들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

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자청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정리되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들이 다른 불편으로 과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법기관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그 또한 제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김선교 의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았습니다.

○김선교 의원 들어가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김선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범계)

(16시38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대전 서구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원래 제 질문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요, 법조인 출신 또 법무부장관을 했던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김선교 의원은 특검에 의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장본인입니다. 여기가 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범계 의원 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지금 체포동의안을 심사하는 장소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전임 군수의 얘기를 하고 또 민주당 지역위원장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눈 뜨고 못 봐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희 일가 잘 봐줘라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양평 공무원의 진술입니다. 출국금지된 사람이 본인을 변호하는 이것이 과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그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국토부에서는 원래 원안에 기초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그리고 차질 없이 하루라도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솔직히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인수위 때부터 노선 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지점에 김건희 일가가 축구장의 세 배 면적의 땅을 소유했다는 바로 이 의혹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범계 의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그저께 4월 4일은 윤석열 탄핵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총리님, 소회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새 1주년이 지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의원**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를 쫓는 격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이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한 그 내란을, 비상계엄의 합당성을 얘기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총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난 총선거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윤어게인 세력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내란 청산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국민적 입장이나 국가적 입장에서 현실의 일상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런 데서 생기는 정치적인 어려움, 긴장 이런 것이 하루빨리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이 좋아지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남아 있는, 시정하고 광정하고 바로잡아야 될 문제들은 끝까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민생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동시에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그 광정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총리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이끄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박범계 의원** 소위 내란 청산 TF입니다. 약 49개 기관, 총리님이 통할하는 행정부처 49개 기관의 TF 조사활동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징계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수사 의뢰는 주로 군 관계자 고위 장성급들이 해당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 징계 요구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라든지 군인사 징계위원회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갈 수도 있겠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은 자체 인사기준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선 큰 틀에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헌법존중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어떤 사전 인지에 의한 계획적 가담의 정도가 작고 특히나 본인들이 자신의 관련성을 미리 일종의 스스로 밝힌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그것을 경감하는 쪽으로 하자는 원칙을 일단 갖고 접근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사규정과 현재의 법 그다음에 국민적인 판단을 감안할 때 상당히 강도 있는 조치들이 그런 경우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구체적인 관련성에 따라서 인사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의원** 넬슨 만델라가 소위 고백하면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지요.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본인의 잘못들을 인정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 부분을 제일 처음부터 대통령님께서, 아마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계엄을 시작할 때부터, 계엄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막아 낸 직후부터 이 계엄과 내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와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조가 꼭 유지가 됐고 헌법준중 TF에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반드시 적용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기술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는 데도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 아주 좋은 기조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청산되고 또 공직사회가 안정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신 일들이 많은데요. 제가 법사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무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작년도 국감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헐값 매각의 실태가 워낙 심각하다는 걸 느끼셔 가지고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국기문란이다. 즉시 중단해라’라는 말씀을 해 가지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재부, 관련 부처 중심으로 총리께서 지휘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과 진상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박범계 의원 국유자산 매각의 헐값 실태를 보시면 이게 2023년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그해 8월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느닷없이 국유재산 매각을 활성화해라 이렇게 하고 대통령 윤석열이 바로 맞장구를 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헐값 매각, 말 그대로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파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소위 수의계약으로 덤핑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엄청난 특혜를 준 실태가 있었습니다. 기재부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향후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태, 운용 실태를 잘 모니터링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들이 아마 계기가 돼서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상당히 중하게 생각하셨고……

○박범계 의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래서 정부에 지시를 하셔서 우선 일정 기간 동안 아예 그냥, 현재로서는 재정부의 심사를 거치거나 총리가 재가하지 않은 매각 자체가 일단 금지가 되어 있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근까지는 6건을 검토해서 5건이 오케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렇군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리고 나머지들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일정액 이상은 처리를 했을 때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

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대안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말씀처럼 재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건을 놓고 지켜보니까 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쉽게 놓칠 수 있는 중소 액수, 그런 가액의 것들도 정말 이렇게 구멍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 이후에 이렇게 탁 열려 버린 시기에 아마 그런 정보를 알았다면, 그런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했다면 이렇게 했겠구나 싶은 그런 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잠시 국토부장관 상대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들어가십시오.

재경부장관님.

노고가 많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범계 의원 구윤철 장관님, 방금 총리께 질문드린 것처럼 국유재산 매각, 헐값 매각이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제도개선 하셨지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은 300억 이상 좀 큰 규모는……

○박범계 의원 300억.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사전보고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억 이상, 300억까지는 국유심이라고 저희 재정부에서 총괄하는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박범계 의원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10억 이상 되면 자체 매각심사위원회를 구축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좀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구요.

그리고 만약에 입찰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투명하게 하고……

○박범계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옛날에는 두 차례만 유찰이 되면 그냥 수의계약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절대로 국민의 재산을 헐값 매각으로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의 눈으로 철저하게 집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캠프 사장 누가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게 총리님하고 또 재경부장관님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인 집행부서에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잘 운영하느냐 이것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특별하게 캠프 사장한테도 아주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우리 정부 끝나는 4년 뒤에 이런 얘기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아까 총리님께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국토부로서는 김윤덕 장관님이 지금 지휘하고 계시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구 오류동 국유지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케이스입니다. 이것을 제가 찾아낸 게 캠프 중심의 국유재산 매각 처리 건수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눈에 띄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국유지를 낙찰받은 회사가 그린나래개발, 두 건 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나옵니다. 즉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 가지고 개발 목적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법상 이전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톱이 한 거지요.

그런데 이 그린나래개발은 불과 6개월 만에, 당연히 국유지를 감정가의 절반 가격으로 낙찰받았으니까 얼마나 시세차익이 남겠습니까? 무려 37억 원. 그리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도시형생활주택 97개호를 만들어서 파는 이 작업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사 주냐? LH가 사 줍니다. 모두 다 장관님 소관 사항입니다. 물론 언제 했느냐?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서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를 기억해 주시고요.

중랑구 면목동 땅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나래개발이 낙찰받아서 감정가의 50%로 싹둑 깎아 가지고 사 가지고 당연히 부풀려 가지고 팝니다. 여기에 당연히 어디가 와요?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만에 약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봅니다.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문제는 이 그린나래개발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이 회사의 자본금이 3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입니다. 페이지 컴퍼니입니다. 자본금 3억인 회사가 자기 덩치의 수백 배 되는 국유지를 무슨 정보를 갖고 이것을 낙찰받을까요? 무슨 정보를 가지고 여기다가 어마어마한 주택을 지어 가지고 불하한다고, LH에 판다고 할까요? 이 그린나래개발의 이사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단 둘 이릅니다.

제가 아까 강조했던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신영부동산주식회사, 이 주식회사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장관님 전임 장관이 누구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박상우 장관입니다.

○박범계 의원 그 사람입니다. 윤석열 내란정부의 마지막 국토부장관이 박상우입니다. 국토부에서 기조실장을 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후임이 누구냐? 국토부에서 역시 잔뼈가 굵고 기조실장을 했던 정병윤이 이 신영부동산신탁의 사외이사로 물려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관 커넥션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범계 의원 서울중앙지검 정보팀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지금 내사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까 총리님께서 하신 그 혁신 TF, 내란청산 TF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뿐더러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한번 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들어가십시오.

이억원 금융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정무위에서 뵈다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뵈니까 또 별다릅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불렀을까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

○박범계 의원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코스피 5000입니다. 이미 달성하고 중동 전쟁 시작되기 전에 6347 찍었습니다, 지금 550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연 근본적인 동인이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하여튼 자본시장 자체를 기본적으로 신뢰 위주로,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비정상상을 정상화로만 해도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자본시장을 깨끗하고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범계 의원 결국은 동학개미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고취시킨 데 있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맞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것은 정부가 약속하고 국회가 입법으로 보충하고 그래서 쌍두마차가 결국은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박범계 의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포지티브한 정책뿐만 아니라 네거티브적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탈과 남용과 왜곡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그때 외부 행사, 현장방문 행사로 한국거래소 방문하셔서 말씀하신 근절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금융위, 금감원, 대한민국 검찰은 물론이고요, 지금 집권 한 10개월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넘었나요? 그랬는데 대대적인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있습니다. 합동대응반 해서, 거래소·금융위·금감원 다 같이 합동으로 모여서 칸막이 해제하고 거기서 신속하게 해서 지금 3호까지…… 주가조작 근절, 패가망신 1·2·3호까지 해 가지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3호 케이스까지……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박범계 의원 그러면 1·2호는 발표를 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1호도 그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이 돈을 대고 그다음에 금융회사 사람들이 같이 결탁한 그런 시세조종행위 적발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권사 임원이 사실 내부정보를 친족들한테 한 그것을 했고, 세 번째는 사실 언론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일단은 1·2·3호를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위원장님, 와이드플래닛이라는 소위 정치·문화예술 테마주 들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박범계 의원 저는 여기에 연루되어서 의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 배우들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아니고 성역이 없으면 성역이 없는 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소위 내란이 있기 전, 정확히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무려 보름 동안 거의 10배가 뛰었습니다. 3000원 하던 것이 거의 3만 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사이드카 비슷한 소위 거래소의 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분 내사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개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대로 주가조작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는 저희들이 엄단하겠다는 그런 정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제 오랜 국회 경험에 의하면 정부 부처에, 저도 그랬습니다만 대체로 부인하지 않으면 긍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다라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금융 당국의 지금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하여간 주가조작 이런 부분은 패가망신시켜서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김은혜)

(16시59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 먼저 우리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님께서 ‘우리 국토부장관님’이라 하시길래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 괜찮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의원 장관님, 지방선거 이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의원 그리고 공동주택 보유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입니다. 통상 실거래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정되니까 실거래가에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의원 제가 국토부의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로 본 2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공개된 같은 시간의 공시가격은 18%나 폭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곡동 아파트를 한번 보여 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 조사 결과 실거래가는 이 화곡동 아파트가 10억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5.7억에서 6.3억으로 올랐지요. 이상하지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질의 이후에 이유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구체적으로 파악은 아니지만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어떤 좀 더 테일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은혜 의원 살펴보시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볼 때는 매우 디테일하게 거래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무리 없이 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앞으로 좀 더 이걸 정교하게 할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공시가격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산정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시가격 정비가 필요하다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실제 거래가 되지 않은 지역, 주변은 변화가 있는데 거기는 변화가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문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시가격을 둘러싼, 뭔가 공시가격을 의도적으로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 제 질문을 끝까지 들어 보시지요.

이 아파트의 23년부터 실거래가 내역을 좀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디테일이 뭐가 부족했을까 해서요. 그런데 2년 넘게 10억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실거래가가요. 또 그에 따라 공시가격도 실거래가를 따라 움직였지요, 23년부터 25년까지는. 그런데 유독 올해만 이렇게 위로 튜 겁니다.

제가 아까 일부 디테일 말씀하시고 행정 착오로 보실까 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행정 착오라는 말 안 썼고요.

○김은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제가 서울 전수조사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서울 아파트 100곳을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실거래가가 그대로거나 심지어 떨어졌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곳이 10% 가까이 됩니다.

보실까요? 구로구의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8.7% 떨어졌는데도 공시가격이 2.8%가 올랐습니다. 강서구의 B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거의 그대로인데 17.9%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지요. 서대문구의 저 아파트는 아파트 가격이 무려 11%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3.8%가 올랐습니다.

장관님,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 분석하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각 동별로도 실제 차이가 날 수 있는 범주가 있고요, 101동과 104동을 비교하면 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디테일하게 매우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은혜 의원 매우 디테일 있게 실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건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민간인들이 이걸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서 조목조목 따져 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김은혜 의원 결국은 이중 삼중으로 검토를 하셨는데 이의 제기,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개별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마치 공시가격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건 금물이고 개별 개별 공시가격을 따질 때에는 그 구체적인 걸 놓고 조목조목 따져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은혜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나오는 건 분명히 이상한 거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주변과 결부시켜서 진행해 온 것들이 별문제가 없는 것인지는 그 자체를 놓고 따져 볼 문제가 있다, 그냥 실거래가가 변화가 없는데 공시가가 올랐다 이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 단순 판단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김은혜 의원 장관님, 장관님이 집주인이신데 집값 안 올랐는데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저 공시가격 이미 발표된 겁니다. 저거에 따라서 보유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복장 터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개별, 그 집주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문제는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시중에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까지 나서서 보유세 올리겠다고 하면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눈치 보지 않겠냐는 말을 합니다. 인식이니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장관님께서 지난주에 국민의힘 정부가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따라한 것밖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2012년부터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과 실거래가 변동률을 조사해

봤습니다.

화면에 내 주시지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오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확인해도 이 노란색 구간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바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더 급등한 구간입니다. 파란색, 민주당 정권에서만 보이는 건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죄로 공시가격 올라가서 국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혈세를 낸 게 바로 저 노란색 구간입니다.

장관님, 1가구 1주택, 부동산 보유세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1가구 1주택……

○김은혜 의원 부동산 보유세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세금을 담당하는 재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국토부가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과표 기준이기 때문에 보유세에 직결되므로 공시가격 발표 전에 재정부와 한번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의원님, 들리는 소문으로 얘기하자면요……

○김은혜 의원 답변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장관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들리는 소문을 근거로 질문을 하시는 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은혜 의원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의원 공시가격 발표 전에 재정부와 한번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시가격 발표는,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매우 정량적 접근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감정평가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했고 그 일을 본 당사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주택토지실장이 주관해서 똑같이 한 겁니다.

○김은혜 의원 장관님, 지금 정권 잡으신 지 1년 돼 가거든요. 장관님 지금 전 정부 장관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김은혜 의원 그런데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왜 저렇게 공시가격은 지난 국민의힘 정부와 달리 실거래가보다 높이 오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의원님, 실제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른 것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은혜 의원 보여 드렸잖아요. 실거래가가 그대로인데 혹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오르는 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그 개별개별 사안을 가지고, 서울시내 전체를 놓고 개별개별 놓고 몇 개를 뽑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드는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으니 전체를 다 놓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의원님과 토론한다면 얼마든지 옹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번 따져 보시지요.

○**김은혜 의원** 정부의 조세정책은 단 한 가지라 하더라도, 한 케이스라도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김은혜 의원** 장관님, 웃으셔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집 한 채 장만한 은퇴자가 지금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할 판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수치가 역전되는 이유를 장관님이 명확하게 설명하시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의원님, 의원님 말씀처럼 자꾸 이 정부가 세금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들, 국민들에게 왜곡시킬 위험스러운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의원** 위험한 발언은 장관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 정부에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은혜 의원** 장관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신 바가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취임 직후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세를 둘러싼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요? 그걸 어떤 한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확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세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현재 당면해서 어떤 세금에 대한 판단을 할 거냐의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확대해서 이렇게 의원의 질의에 평가하시려면 장관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질문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두 번 토론한 게 아니잖아요. 저번 국토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김은혜 의원** 그래서 오늘 추가로 나왔던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다단계 검증해서 전문성을 자부하지만 균형성 제고 방안을 추가로 정비하겠다고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걸 언제부터 고치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언제부터 고친다는 표현보다는…… 의원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똑같습니다. 다만 그 원칙을 가지고 산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의 다양한 형태의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일부의 어떤 특정 개인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으니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게 필요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마치 이재명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건 수용할 수 없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혜 의원** 장관님, 억측이 아니라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공박하려고 나온 자리가 아니니까요.

이번에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7월 부과하실 겁니까? 저렇게 공시가격이 상승한 부당한 조세라고 받아들이실 국민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상태로는 이대로 부과한다,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된 바가 없고요. 다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국토부 차원에서 부동산원과 함께 또 이 문제에 늘 참여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저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언제부터 한다, 여기서 4월 며칠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주택토지실하고 의논을 해서, 주택실하고 좀 더 논의들을 진행한 후에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김은혜 의원 그러면 7월에 부과하는 것을 보류하고라도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잠정 멈춰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생각할 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 번 진행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A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 B, 고려해 볼 때 제가 더 따져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걸 올스톱시키고 새로 정리해야 될 상황의 어떤 위중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 저게 심각하지 않다고요? 장관님은 저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당한 조세 정책을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거야말로 저는 부당한 착취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변한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의원 언제까지 남 탓 하시겠습니까?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저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강권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부의장 주호영 김은혜 의원님, 잠깐만요.

국회를 방문한 국민들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의 소개로 경남 함안 대산중학교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대산중학교 학생들의 국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김은혜 의원 김민석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란전쟁 여파에 수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리님.

제가 이재명 정부가 중동 체류 국민을 위해서 군 수송기 투입한 걸 봤습니다. 구조에 성공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

요.

그런데 같은 국민이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코로나 사태 기억을 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은혜 의원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또 국민은 국가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대로 백신을 맞았는데 사망자가 2800명, 이상반응이 48만 명 그리고 중증환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름 없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숨졌습니다. 주변에 혹시 이와 같은 사연이 있으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코로나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학생들도 있어요. 아침에 등교해야 하는 아들이 못 일어났고 응급실에서 ‘아빠’라는 한마디 한 게 유언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들어 보셨지요? 곰팡이 등 이물질 백신과 동종의 제조번호 1420만 회분이 그대로 국민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백신을 수거하지도 않았고 접종 중단을 하지도 않았습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몸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지 못했던 거지요. 이 사실을 총리님, 대통령께 보고하거나 논의하신 바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 사실을 논의하거나 보고한 바는 없고요. 코로나 백신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지난해에 코로나 관련한 보상에 관련한 법이 개정된 이후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대통령께 보고하신 바는 없고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안을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습시다. 아마 혹시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일상적인 대통령실을 통한 경로로 받으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이렇게 위중하게 걸린 사안인데 이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통해서 아마 보고되거나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법 개정이 된 이후에 현재 관련한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한 피해자 단체와의 협의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심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판정 기준도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에서 추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인과관계에 관련되는 보상의 병의 종류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한 논의를 오늘도 제가 마칩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아쉬운 데 대한 요구가 계속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상의 영역이 넓어져서 그 또한 더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전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법원에서 이미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고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 23년 차 공무원 아버지. 그런데 돌아가셨지요, 백신을 맞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혜 의원 향소했습니다. 왜 향소하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아마도 그 부분은 지금 향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간의 피해자 단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 새로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구성된 새로운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아직 법원에서의 결정이 의료적인 판단을 완성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어서 일단은 향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김은혜 의원 위원회, 의료적 판단, 생각보다 답변이 너무 기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김은혜 의원 백신 국가완전책임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완전책임제라는 것은, 과거의 이전 정부까지는 인과관계에 의한 보상만 했습니다. 그 인과관계에 의한 보상의 범위를 추정으로 넓히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요소를 넓혔다고 해서 추정이 허용되는 논리적 근거까지도 제외한 모든 사망에 대해서 다 보상한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원래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의 관련성을 최대한도로 넓게 보는 쪽으로 우리가 적극 해석하자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책임제라는 것과 또 인과관계에 의한 기존의 판단과 또 이 정부 들어서 된 인과관계의 추정까지로 범위를 넓힌 것 이것은 각각 개념의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김은혜 의원 총리님이 말씀하신 좁은 의미의 국가완전책임제 그거 누구 공약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국가완전책임제는 많은 정치인들이 했고 아마도 여쭙보시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가완전책임제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과성과 상관없이 코로나 백신 이후에 사망한 모든 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아마 제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은혜 의원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소를 하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저 부분이 반영돼서 이번에 법에 기존의 인과관계에다가 추정까지 하는 부분으로 넓힌 것입니다.

○김은혜 의원 그러면 왜 향소를 하십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향소 남용은 국민 고통이라 하셨는데 대장동 범죄자 남욱·정영학 그리고 돈봉투 송영길까지 범죄자는 줄줄이 향소 포기를 시키면서 저 생때같은 가족 잃은 국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집요하게 향소를 하세요?

○국무총리 김민석 두 가지 문제를 섞어서 질문하시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김은혜 의원 제 질문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화를 내실 일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씀하

십시오.

○국무총리 김민석 아니, 제가 질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은혜 의원 저의 질문의 요지는, 범죄자 인권은 소중하고 피해자 국민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혜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 항소 포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이나 부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검찰이 스스로 포기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국가가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조금 더 판단을 정확하게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자문위원들의 판단까지를 들어서 저는 당국에서, 해당 부처에서 항소를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여러 번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부분이 일단 항소가 그렇게 된 것을 이해했던 이유는 그것을 판단한 전문가, 자문위원들이 새롭게 구성된 분들로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료적 분석을 한 이후에 이것은 한 번 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항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항소 자체를 무조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로서도 권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은혜 의원 이 부분을 직접 유족이나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혜 의원 총리님이 코로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에 직접적으로 국민 앞에 말씀하신 바는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던데요.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과거에 보건복지위원장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일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을 빈적도 많고 이 관련한 사안을 다룬 적도 많고 이 사안이 지난해에 개정되는 과정으로 인과관계에 엄격하게만 얹히면 안 된다는 주장도 오래 해서 이러한 추정으로의 확대 과정에도 일정하게는 저의 노력도 아주 작게는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있으셨을 때 K-방역 성과를 홍보하시면서 코로나에 협조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쓰신 책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인사가 지금 6년째 외면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항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면 코로나가 빨간 코로나, 파란 코로나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은혜 의원 초록이 동색이라고 국민들은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일이어서 쉬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목숨값이 정권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특히 코로나 피해 유족들에게 인색한 겁니까, 이 정부는?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특별히 코로나 피해 유족들에게 이 정부가 인색한 거냐고 물으시는 것은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그간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이 정부가 마치 인색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인상효과를 만드시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한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사연들을 봤기 때문에 엄격한 인과관계로 그동안 해 왔던 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각박한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까지 온 것입니다.

현재 현안이 돼 있는 이번 항소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 심정으로는 그냥 한 번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다 항소를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이 한 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과학적 판단의 기회를 조금 더 갖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하는 점을, 또 그것을 감안한 부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보고를……

○**김은혜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김민석** 죄송합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항소까지 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항소의 과정을 거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문제가 정리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승소하신다면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전체의 어떤 기준을 정리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 점에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개인적인 아쉬움을 말씀하시자면, 저도 드리면 이 정부는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지요. 항소 포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범죄자 풀어놓고 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없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 또 유족들에게 이제는 인과성을 유족들이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도 공약 파기이자 저는 또 한 번의 거짓말을 입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스스로 보여 주셨듯이, 의원님이 보여 주셨지 않습니까? 인과관계만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 주서 놓고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것은……

○**김은혜 의원** 입법에 따른 결과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스스로 보여 주신 PPT에 위배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 항소 취하는 안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질문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 대통령 죄 없애는 공소 취하, 취소 국정조사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일 텐데요. 생각 안 하셔 봤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셨던 질의의 순수성에 비추어서 제가 답변 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의원** 법치와 약속의 문제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김은혜 의원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이 한 가지입니다. 요즘 국민들은 집을 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세상을 뜨자니 상속세 걱정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국민인데 보호받는 국민이 있고 외면받는 국민이 따로 있지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두 얼굴의 정부, 과연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 답을 국민께서 증명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주호영 김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권향엽)

(17시27분)

○부의장 주호영 다음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서 38일째입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는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들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충격을 넘어 국내 경제에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정상화 이후의 시간까지도 매몰비용으로 다가올까 봐 더욱 초조해집니다. 오늘 참석하신 김민석 총리님과 국무위원 모든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국민들께 체감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번 추경의 합리성과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확인하고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수시·서산시·포항시·광양시 이 4개 도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서산하고 어디 어디요?

○권향엽 의원 여수·서산·포항·광양.

○국무총리 김민석 다 최근에 그 해당 지역의 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같습니다.

○권향엽 의원 예, 이 4곳 모두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해당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있고 고용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고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권향엽 의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라든가 중소기업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그다음에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기업 대출 이자 보전 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총리님, 이 4곳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아주 강한 압박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4년 동안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산업위기대응지역에 기업이 274곳인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처럼 4.2% 정도의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였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이 내용 좀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내용 알고 있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당국에서 그것을 그 해당 지역에 적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장관 새로 오셨으니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전기료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활로를 찾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감사합니다.

○권향엽 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야 어려운 지역, 어려운 국민, 어려운 산업 다 돕고 싶은 마음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과 원칙, 형평성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현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알다시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입니다. 그럴 때 지난번에도 여러 지역이 소위 조선 문제로 인해서 지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전기요금 감면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잘 알다시피 이번에 저희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하면서 공공요금은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즉 전깃값은 인상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관련 업계가 전기요금으로 인한 중동 상황과 연계된 추가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즉 저희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고유가 대응이라고 하는 추경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하지는 않는 측면이 두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 업종에 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석유화학이라든가 또는 철강이라든가 이런 데만 해당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업종별로,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차등요금 적용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제외

하고는 이렇게 업종별로, 지역별로 할인은 따로 없었습니다.

○권향엽 의원 따로 없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들 지역에 더 추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위기대응지역의 산업군과 지역민들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파장을 같이 연달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소모성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 제조업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 위기의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전향적인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산업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한 번 더 긴급지원을 감안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다시피 지방 또 우리 전 국민에게 또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그리고 피해 산업과 계층에게는 또 소외계층에게는, 저희가 이번에 3단계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과 주민들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 관련된 부분을 짚어서 말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만 지원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산업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농어민, 청년 이런 모든 영역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아시겠지만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안의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기술 컨설팅, 재직자 전환 훈련 이런 게 지원 중이고 이번에도 추경에서 이 부분을 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답아 났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 감면 관련해서는 사실 한전에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 저희가 아까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중 검토를 좀 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 과정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폭등한 유류값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최고가격제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산업부하고 공정위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도 관련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권향엽 의원 지난 국무회의 때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가 언급이 되었는데요. 과기부가 시민들이 매입 가격을 알 수 있어야 폭리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대통령께서도 객관적인 가격 정보 제공하는 것은 비교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진행 사항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예.

○권향엽 의원 그런데 산업부가 이미 2022년에 석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서 석유제품의 판매 대상별·지역별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산업부는 정유 4사가 98% 이상을 담당하는 과점 구조라면서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권향엽 의원** 이 시행령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다가 업계의 반발과 유가 안정으로 현재까지 심사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과는 산업부가 요청하면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공급가격 사전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유소에 공급할 가격을 미리 통보하고 언론에 그 가격이 공개됩니다. 그러면 지역별 공급가격도 공개하고 있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는지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2022년도였지만 산업부는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에 대한 입법…… 산업부가 도매가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 그런 사안입니다. 다른 노력 할 필요 없이 중단된 이 심사를 재개 요청만 하면 되는데 하실 의향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저도 이번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알게 됐고요. 일본 얘기는 오늘 의원님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이 사실은 그 전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정부 들어서 이 상황 되기 전에는 별로 제기된 바가 없어서, 저희가 규제 관련 심사를 하면서도 현안으로 된 적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적극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이후에 대처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2008년도 휘발유 가격 공개 사이트인 오피넷이 생겼을 때도 업계에서는 담합이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가격은 5년 만에 최저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가격 구조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매가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심사 재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다음은 산업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원 공급망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정이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빠르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권향엽 의원** 그런데 장관님, 이번에 중동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나프타에 대해서는 국내 비축량, 수출입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따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부가 나프타 공급물량 관리를 할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고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원래 나프타가 워낙 휘발성이 높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비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그래서 저희도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민간이든지 저희들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비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공급물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프타의 생산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저희들이 직접 보고를 받기로 돼 있고 또한 나프타의 수출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형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나프타 공급물량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다운 빠른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산업부에서 합성수지와 같이 나프타 원료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 공급물량 관리를 위한 고시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고시가 언제 제정될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나프타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급 전체적인, 공급망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도 하고 국내 생산을 국내 판매로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석유화학제품에 관련된 상황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 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이와 관련해서 부처 간에 이견은 없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이견은 없습니다.

○권향엽 의원 장관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석유화학 업계와 플라스틱 업계 간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서 상생협력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부도 참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의원 나프타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합성수지 공급가격도 덩달아 급등을 합니다. 합성수지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내는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들이 석유화학 대기업의 급격한 가격 인상 통보를 받아서 커다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합성수지 가격결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도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석유화학 공급사들하고 수없이 많은 석유화학 수요처들 간에 어떤 힘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향엽 의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서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쟁점 사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합성수지 공급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석유화학사들은 뚜렷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합성수지 가격도 3개월 평균 가격을 반영해서 2주 단위로 가격을 발표하는 시차제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합성수지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하나로 통일된 가격결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플라스틱 업계 최고가격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도 듣고 알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쪽은 최고가격…… 지금 현재 정유 최고가격 같은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가 딱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가격을 통한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플라스틱 같은 업종은 한 10단계 정도 내려가는 업종들이 있어서 그 최고가격제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은 근본적으로 나프타의 공급을 우선 확대하는 게 제일 근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핀셋처럼 각 파트마다 지금 공급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들을 부처하고 같이 모니터링해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을, 그거를 통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합성수지의 가격결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분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중소기업 규모의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석유화학 대기업에 비해서 협상력이 약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결정 체계 논의 과정을 시장의 자율적인 협의에만 맡겨 두면 사실은 중소 업체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합성수지제품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확실하게 키를 잡고 논의 과정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그러한 역할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주무 부처로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 보면 나프타 수입 차액분에 대해서 50% 지원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좀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물량 확보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방안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차액 보전 50%에 대해서?

○국무총리 김민석 우선 현재로서는 차액 보전 50% 안이고요. 100%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것이고요. 정부와 기업이 그렇게 부담을 지는 것이고, 얼마나 장기화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또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권향엽 의원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은 나프타를 원료로 생산하는 합성수지와 합성수지를 원료로 생산하는 각종 플라스틱, 비닐 제품에도 연쇄적으로 추경 효과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총리님께서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국무총리 김민석 어떤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권향엽 의원 연쇄적으로……

○국무총리 김민석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권향엽 의원 나프타 수입 차액분 지원이 사실은 마지막에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에게서 효과가 전달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김민석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간접적인 경제효과로 되느냐, 직접적인 배분으로 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잘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향엽 의원 그런데 사실은 추경 효과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최종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까지 물가 인상 부담이 그대로 떠안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추경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앞서 산업부장관님께서도 이야기했던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의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석유화학제품 중간 유통망 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니

다. 석유화학사들과 플라스틱 제조업체들 간의 직거래도 있지만 실제 중간 유통망인 대리점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거래 과정이 복잡할수록 나프타 지원금 추경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간 유통망 점검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예,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의 품목들 점검하는 데 이렇게 인력들이 배치돼 있어서 그거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권향엽 의원 산업부가 지난 3월 27일 날 나프타 공급물량 관리체계 고시를 제정한 데 이어서 석유화학제품 공급물량 관리체계 고시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고시가 제정되면 정부가 직권으로 합성수지제품 공급물량도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데 총리님, 그런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매점매석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사는 산업부 소관이라고 그러고 산업부는 재정부 소관이라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와 조치에 대한 권한이 재정경제부에 있는지 산업부에 있는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지 이게 불분명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총리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통상적으로 매점매석이나 불공정거래에서 위법적 행위에 대한 부분은 최종 끝단에서는 공정위가 해 온 것인데 앞단에서는 관례적으로는 산업적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하고 재정부가 총괄적인, 일종의 정책적인 총괄을 했달까 이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보니까 이게 딱 매점매석을 어디서 짚어 내는 거냐에 대한 법적인 규정 내지는 역할 분담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대목도 있거나 또는 법적 미비가 있는 것 같다는 발견을 저도 한 참이어서 이것은 조정 내지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원료를 확보하더라도 물량 잠금으로 해서 그 효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향엽 의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권향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지혜)

(17시51분)

○부의장 주호영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박지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 공급망 불안, 대미 통상 압박과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거센 파도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 줄 방과 제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 목적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 재정의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아닙니다.

○박지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질의 중에도 잠깐 이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2026년 3월 말에, 올해 3월 말에 OECD가 중간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준을 유지했지만 우리 한국의 GDP 성장률은 2.1%에서 1.7%로 0.4%p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사실 새 정부 들어서 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 전망을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성장률은 떨어뜨리고 물가 올리는 건 더 나쁜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 수입 구조에 훨씬 의존적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훨씬 취약한 거지요.

○박지혜 의원 맞습니다. 중동발 대외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동에 대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컸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총리님, 방금 오후에 저희가 질의하는 동안에 뉴스가 나와서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란이 휴전 후 종전 2단계 중재안을, 거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진위도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중동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그 전망을 낙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 김민석 가급적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큰 틀에서 종래의 원유 공급선도 좀 더 다변화하고 에너지 공급체계 자체를 원래도 바꾸려고 했지만 더 가속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 그렇지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지표도 보니까요, 전망도 보니까 조기 종전이든 봉쇄가 장기화되든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든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유가 전망을 한 것을 보니까 조기 종전을 하더라도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내년까지도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유가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에너지 소비 구조를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31일에 국무회의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산업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셨고요. 오늘도 국무회의를 통해 점검하시면서 에너지 대전환의 대책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전환을 가져온 그런 대외 경제 요인들이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또 이런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민석 그렇습니다.

○박지혜 의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아시다시피 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고 뒤에서 두 번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OECD 국가들이 에너지 수급 구조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해서 탈화석 연료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나선 것이 비로소 오늘날의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번 추경에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국무총리 김민석 큰 틀에서 그렇게 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높이는, 전기화 비중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대통령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이번에 구조적인 대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AX와 함께 GX 부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혜 의원 중동 사태의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추경이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은 빼야 한다 이런 주장은 저는 정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추경에서도 저희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 잘 지켜 주시고 저희 정부 2년 차 예산, 2027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을 텐데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 에너지 대전환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민석 저도 전보다 훨씬 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고맙습니다.

○박지혜 의원 저희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장관님께서도 모두 동의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결코 아니고요. 또 하더라도 더 속도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경제안보 그리고 글로벌 탄소 감축과 관련된 이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또 지원할 것입니다.

○박지혜 의원 그런데 저희 추경 26조 2000억 원인데요. 그중에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

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한 4730억 정도로 저희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 그러세요? 저는 훨씬 범위를 좁게 본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2200억, 보급지원 사업 623억,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90억 등등을 합치면 저는 290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추경의 약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도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부분이 3537억입니다.

○**박지혜 의원** 그렇군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지원 등이 있고요. 또 대학의 시설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 부분이 119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꼼꼼이 한번 따져 봤습니다. 전체 추경 26.2조만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중에서 법에 의해서 지방으로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한 9.5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등등등 포함하면 지방으로 가는 게 총 9.7조거든요. 거기에 지금 석유 최고가격제라든가 또 고유가 피해지원금 같은 것을 빼고 나면 실제 한 5.3조, 5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조 3000억 중에서 4730억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한 9%가량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적다고 의원님께서서는 보시겠지만 추경 규모에 대비하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다만 총리께서도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대통령님께서 좀 더 속도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더 촘촘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들여다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도 그런 콘셉트인데 내년도 예산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반영되는 전 과정이 처음으로 편성되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그런 능동적인 예산을 적극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희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말씀드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예산이 또 빠르게 편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도 9% 정도 편성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 예산은 꼭 지켜 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전폭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 장관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고맙습니다.

○**박지혜 의원** 이어서 기후에너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두고 중국 기업만 배불린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재생에너지 지원이 중국만 배불리는 지원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재생에너지 분야 중에 특히 태양광을 아마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아쉽습니다. 지난 정부 때 재생에너지의 ‘재’ 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국내 태양광 산업이 그래도 유일하게 중국에 맞서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마저 태양광 산업을 살리지 못하면 전 세계 시장을 중국이 독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원숭이 꽃신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의 태양광 산업을 반드시 살려 내야 된다는 각오로 태양광 분야에 가급적 국내 생산기반을 다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비판을 보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도 중국을 배불린다는 주장은 셀 시장을 보고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셀의 점유율이 2023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해서 2025년에는 무려 96%까지 올라갔습니다. 태양광 셀이 태양광 패널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잖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렇습니다.

○박지혜 의원 아마도 모듈 전체의 원가에는 약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태양광 셀 분야에서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 그래프에서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광범위한 조사·감사를 통해서 태양광 산업을 옥죄고 또 보급사업 물량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우선 보조금을 주는 해외에 많이 진출하면서 국내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그런 측면이 큼니다.

○박지혜 의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매진하던 지난 5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1100명의 종사자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을 떠났고 매출액은 2022년에 16조 원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액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 마중물의 역할을 한 정부 보급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예산 약 2500억 원 줄어들었고요. 보급지원예산도 1650억 원이나 감액됐습니다.

도대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를 이 지경으로 망쳐 놓은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산 비중이 높으니깐, 이제는 중국산 비중이 너무 높아졌으니깐 이 분야에는 예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를 여기저기 많이 보여 드리는데요, 보여 드리면 듣는 분들마다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지금 투자한다고 다시 복구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장관님, 우리 무너진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과연 복원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태양광 산업도 더 육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탄소 모듈을 사용하

는 국내 기업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 많이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텐덤 셀 등 일종의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태양광 R&D 투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태양광이 다시 우리 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 생산세액공제라든지 새로운 정책적인 수단도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은 경제부총리님이 주관하고 계시……

○박지혜 의원 경제부총리님께서도 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원유 수급이라는 게 플라스틱 제품의 수급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오늘 계속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 부족을 시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매 제한 정책도 시행을 했습니다.

장관님, 종량제 봉투 수급 정말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통령님이 여러 차례 절대로 가격 인상은 없다 그리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 봉투도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신 직후부터는 우리 국민들도 대체로 안심하시고 더 이상 사재기와 같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 더 이상 그 분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프타의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걱정까지 저희가 하게 된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 원료 수급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페트병에 대해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1월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사실 페트병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포장재 등 여러 제품군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원료를 원유에 너무나 의존하는 그런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생원료 수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도 처음으로 PET 분야, 페트병의 재생 사용 비율을 10%까지 했는데 2030년까지 30%로 올릴 예정이고 그 외의 다른 원료들도 재생원료 사용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재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기를 교체하는 데에 정부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한 번 사용된 것은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라스틱 분야에서도 재활용률을 적극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를 포함해서 관련한 정책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위기에 잘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행 기업공시제도로 그러한 투자자들의 정보 수요를 잘 충족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그래서 저희들이 ESG 공시제도를 제도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지혜 의원** 그 제도 로드맵 초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3월 말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예.

○**박지혜 의원** 혹시 반응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금융위원장 이억원** 이것은 전통적으로 산업에서 보시는 분들과 환경에서 보시는 분들 간의 시각차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좀 신중하게, 방향은 다들 동의하시는데 속도를, 좀 준비된 후에 가자는 신중론이 있고 또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하자는 적극론들이 있어서 그런 양쪽의 측면들이 다 그렇게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박지혜 의원** 저는 사실…… 이게 환경 측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국민연금이 이 로드맵 초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냈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금융위원장 이억원**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박지혜 의원** 도입 시기도 너무 늦고 대상도 너무 좁아서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로서 기업가치 제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더라고 합니다.

금융위의 ESG 공시 초안,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이 ESG 공시 로드맵 다시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이억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우리 산업의 현실도 봤지만 말씀 주신 대로 국제적 정합성, 그래서 우리 산업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수용성도 봤지만 글로벌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EU가 제일 먼저 앞서가 있지만 EU도 27개 국가 중에 19개 국가는 25년도부터 도입했고, 그렇지만 독일을 포함해서 8개 국가는 아직 의무화를 국내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나 영국 이런 데도 기준은 마련했지만 아직 의무화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7년 6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대상 규모를 한 4%, 우리는 6.9% 정도 커버하는데 거기는 4%로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뒤처져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그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할 때 지금 뒤에 계시지만 산업부장관님이랑 그다음에 기후부장관님이랑 저희들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내용적으로는 신중해야 된다, 적

극론으로 해야 된다 하시지만 다 공감하시는 부분은 그래도 정부가 이제는 미루지 않고 의사결정을 했다, 용기 있게 했다 이 부분만큼은 다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면 일단 시작을 하면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 제가 지난 금융위원장님께도 이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국제기준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에는 사실 동의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여러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장기투자 하고 싶은 투자자 그리고 ESG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ESG 공시는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공시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오히려 너무 저평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말씀 주신 취지 잘 알겠고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박지혜 의원 제가 20년 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그 일을 했습니다.

○금융위원장 이익원 예,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준을 통일시키고 표준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건데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의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호영 박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	투표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김정호	163	김형동	16	김소희	7	김위상	6	박형수	5
	이종배	5	조지연	5	박 정	2	강득구	1	곽상언	1
	김주영	1	김태선	1	서왕진	1	우재준	1	주진우	1
	기권	1								

○출석 의원(26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희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현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식	이상희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현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 희		

○개의 시 재석 의원(163인)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홍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기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성희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 윤	김은혜	김정재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한규	김 현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중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정하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영하	윤건영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달희	이상식	이상희	이성윤	이소영	이소희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용선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현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이자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성국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최보운 최수진 최혁진 한기호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산회 시 재석 의원(12인)

권향엽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운덕 박지혜 박홍근 서지영 이재관 주호영
 진성준 최혁진

○청가 의원(21인)

강민국 강선우 김남희 김상욱 김우영 민형배 박상웅 박정 신정훈 안규백
 안호영 용혜인 윤재옥 윤종균 이원택 이재정 전재수 정동영 정성호 최은석
 황운하

○국회 참석자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김승묵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김민석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국토교통부장관 김운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출석 정부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행정안전	이재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6. 4.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병도	이재관		

○의안 제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3)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6)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6. 4. 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8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26. 4. 3.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5)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요청안

(2026. 4. 3. 대통령 제출)

이상 40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2026. 4. 3. 우원식 의원·한병도 의원·서왕진 의원·윤종오 의원·천하람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99)

○청원 제출

해외건설 불공정 계약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4. 3. 한재웅으로부터 배준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87)

4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서면질문서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 변경 규정의 소급 처리에 관한 질문서

(2026. 4. 3. 김승원 의원 제출)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2026. 3. 30. 기준

국회 소속 기관 간부석

의사국장
사무총장
의사1팀장

국무위원보좌석

